



SHIN&KIM

법무법인 세종

EU의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강화되나?

Copyright by Daeyong Baek

December 12, 2013 (Thursday)



1.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 개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

❖ The Proposal of EU Commission

- ❑ EU 집행위원회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1995 EU Data Protection Directives)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규칙 제정(안)이 포함된 “21세기 유럽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제안 (2012.1.25)
- ❑ Two legislative proposals
 - ✓ A **Directive** on protecting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and related judicial activities
 - ✓ A **Regulation** setting out a general EU framework for data protection
- ❑ Directive vs. Regulation
 - ✓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지침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이행되므로 회원국마다 지침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
 - ✓ 규칙(Regulation)은 유럽의회를 통과하여 유럽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는 순간 EU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규칙으로의 형식 변경은 EU 역내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

❖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배경

- 1995년 지침은 그 목적과 원칙에 관한 한 여전히 유효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EU 전체의 통일적 집행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
 -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공유와 수집의 양이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
 -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구축이 요청되었음.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 결여는 소비자에게 자칫 새로운 서비스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이러한 신뢰구축에 있어 중심적인 기능을 함
 - ✓ 이런 시대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EU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할 시기가 되었음
 - ✓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to strengthen online privacy rights), EU 역내 시장에서 디지털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to boost EU's digital economy), 사업자들과 공공기관들은 법적·실무적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

❖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목적

- ❑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며 EU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 Viviane Reding (EU Commission's Vice-Presiden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a fundamental right for all Europeans, but citizens do not always feel in full control of their personal data. My proposals will help build trust in online services because people will be better informed about their rights and in more control of their information. The reform will accomplish this while making life easier and less costly for businesses. A strong, clear and uniform legal framework at EU level will help to unleash the potential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foster economic growth, innovation and job creation."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

❖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특징

- 1995년 지침에 비해 그 내용과 효력이 한층 강화됨
 - ✓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을 제안하였음. 즉, 법형식이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으로 격상됨
 - ✓ 새로운 개인정보기본권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시적으로 도입
 - ✓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강화. 특히 단일의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설치.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장으로 구성
 - ✓ 위반 시 강력한 제재(최고 1백만 유로 또는 회사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2%)
- EU개인정보보호규칙이 입법화되면 EU역내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EU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은 이 규칙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추어야만 하는 상황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

❖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에 대한 의견

- 1995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2012.2.17. ~ 3.6.)
 -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 공유와 수집의 양이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보보호법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규칙(안)은 현재의 법체계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
 - ✓ 시민단체 : 법안은 자신의 정보처리를 조절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한 것임
 - ✓ 공공 및 민간단체 : 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합법적인 요구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며, 특히 잊혀질 권리, 유출통지 및 과도한 과태료규정은 정보처리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임
 - ✓ 규칙(안)의 “one size fits all” 접근방식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점, 그런 이유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2.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구체적 내용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 1조 : 목적

-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한편, EU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 그러므로 EU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됨을 명백히 함

❖ 제 2조: 적용범위(물적 범위)

-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 이외의 수단에 의한 처리에도 적용
 - ✓ 결국,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디지털 정보의 처리 뿐만 아니라 수기 등에 의한 정보처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 3조 : 적용범위(지역적 범위)

- EU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
- EU외에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EU내에 거주하는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
 - ✓ 정보처리활동이 EU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 또는 EU내에 있는 정보주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웹사이트 쿠키 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이 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은 다른 비EU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음
 - ✓ 반면, EU 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이 없어 실효적 법 집행이 어려울 것이며, EU 시민들은 EU 역외에서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EU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 4조 (1) & (2): 정보주체 & 개인정보

- ❑ 정보주체란 직·간접적으로 고유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Identifier,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식별 가능한 사람
- ❑ 개인정보란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
- ❑ 관련 논의
 - ✓ (사업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상황,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것임
 - ✓ (시민단체) 개인정보개념이 넓게 정의되면 될수록 정보주체는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임
 - ✓ 가령, IP주소의 경우 사이버 범죄자 등이 열람청구를 통해 범죄 행위 전에 대상기업이 자신의 IP정보를 알고 있는 여부 및 범죄행위가 추적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 낼 수 있지 않을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 4조 (8) : 정보주체의 동의

- ❑ 동의란 정보주체가 문서 또는 명백히 능동적인 행위로,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것
 - ✓ 인터넷사이트에서 동의표시박스에 표기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며, 침묵이나 무응답은 동의에 해당되지 않음
- ❑ 동意的 “명백성(explicit)”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意的가 필요한 경우 ‘opt-in’방식을 제공해야 함
- ❑ 관련 논의
 - ✓ 대부분의 고객들은 신속하고 사용하기 편한 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데 동意的의 “명백성” 요건에 따른 웹사이트에 마련되는 opt-in방식의 동의절차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해칠 것임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7조 : 동의의 요건

-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 정보주체의 동의가 다른 사항과 관련되어 문서 형태로 주어진다면 동의관련 내용은 외견상 그 다른 사항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함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자유롭지 못하고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철회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의 유효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함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동의를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동의의 취소는 취소 전에 동의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처리의 합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관련 논의
 - ✓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위해 정보처리자는 동의서를 복사·저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일 수 있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8조 :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13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는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집적 동의하는 경우만 합법적임
 - ✓ 개인정보처리자는 입증가능한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용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 다만, 아동과 관련된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회원국의 일반 계약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름
- 관련 논의
 - ✓ (시민단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와 배치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갖고 수집하고, 전달하는 모든 자유를 포함
 - ✓ 사업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마케팅 목적이나 행태광고 등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개인정보가 자동화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일정한 조치요청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단을 제공해야 함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그 조치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의 이유와 감독기관에의 이의제기 및 사법기관에 권리구제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함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 등 일정한 사항을 그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된 경우 위 사항 및 개인정보제공의 강제성 여부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결과(영향)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함
 -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정보의 출처를 알려 주어야 함
- (정정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 정보주체는 정정문(corrective statement)으로 보완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완전한 개인정보의 완성을 요구할 권리도 가짐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17조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삭제 또는 배포 금지 요구권)
 - (1)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기간이 도과한 경우
 - (2)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우
 - (4)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이유로 이 규칙안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에의 링크나 복사 또는 복제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수단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 ✓ 다만 (1)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 (2)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3)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경우, (4) EU법이나 회원국 법에 의해 정보를 보유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17조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 정보삭제 보다 처리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 정보주체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여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증거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3) 처리는 위법이나 정보주체가 삭제를 반대하고 대신 처리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다른 자동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링크, 복사 또는 복제를 삭제하지 않은 자에게 500유로부터 60만유로까지, 또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전세계 이익 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17조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 관련논의

- ✓ 이 조항은 비현실적이며, 온라인상에서 정보는 순식간에 복사되어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온라인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의 진위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승인해야 하는지 등 제17조 이행을 위한 구체화 필요
- ✓ 잊혀질 권리는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용되어 사기 행위 등의 범죄행위 수사 및 조사에 방해가 될 것임
- ✓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 (소비자단체) 소비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할 것임
- ✓ Google, Facebook, Twitter, Naver, Kakaotalk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주체가 삭제나 처리제한을 요청한다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31조 & 제32조 : 유출통지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한 후 24시간내에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함
 - ✓ 다만, 정보처리자가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보호조치가 유출된 개인정보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됨
- ❑ 관련 논의
 - ✓ 유출통지는 필요하나, 유출인지 후 24시간 내에 지체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
 - ✓ 24시간은 정보유출 여부, 유출 정보의 해당 정보주체, 유출규모 등을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임
 - ✓ 감독기관과 정보주체는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통지를 받게 되어 “notification fatigue”에 시달릴 것이며, 빈번한 통지는 오히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40조 :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 처리중이거나 제3국으로 이전 후에 처리될 것이 의도된 개인정보의 이전은 개인정보보호 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
 - ✓ 집행위원회는 제3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음. 집행위원회가 제3국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
 - ✓ 집행위원회는 제3국이 시행중인 일반 및 개별분야의 관련법이 EU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사법적 구제를 포함한 집행가능권리를 보장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보호수준이 보장되고 있는 또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제3국의 명단을 공보 (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공표하여야 함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79조 : 행정적 제재

- 감독기관은 위반의 본질, 중대성, 기간,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이전의 의무위반 여부, 시행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 각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독기관을 마련하여야 함. 감독기관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
 - ✓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통제를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이 별도의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벌칙(Penalties)
 - ✓ 각 회원국의 입법에 위임
- 행정적 제재(Administrative sanctions)
 - ✓ 개인정보보호규칙(안)에 직접 규정
 - ✓ 위반의 성질, 정도 및 기간,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의 정도,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주요 내용

❖ 제79조 : 행정적 제재

- 경고 조치(최초이며 과실로 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자연인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 2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업무 수행 중 부수 활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고의·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과태료 부과
 - ✓ 최고 25만 유로 또는 기업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0.5%까지 부과
 - ✓ 최고 50만 유로 또는 기업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1%까지 부과
 - ✓ 최고 1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2%까지 부과
- 과태료부과는 감독기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 ✓ 관련조항들은 모두 “감독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impose a fine...)”고 규정됨



3.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 개정 관련 참고사항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 개정 관련 참고사항

❖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PRISM Project

- CIA와 NSA에서 근무하였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 6. NSA가 전세계 첩보 감시망인 프리즘(PRISM)을 통해 개인정보나 통신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수집·감시하고 있다고 폭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
 - ✓ 미국 정보당국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 9개 글로벌 IT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서버에 접속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판단됨
 - ✓ 스노든의 폭로로 각국 정상들과 외교공관에 대한 감청문제에서 시작해 내부적으로는 미국국민들에 대한 감청과 감시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버려 미국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함
 - ✓ 스노든의 폭로 이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EU가 공동 대처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TTIP 협상의 종단을 주장함. 메르켈 독일총리도 미국을 기소할 수 있다며 초강경 반응
 - ✓ 하지만 유럽 정치권은(심지어 프랑스와 독일마저도)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대부분 거절함. 양심을 이유로 국가기밀을 폭로했고 그로 인해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 개정 관련 참고사항

❖ 미국 국가안보국(NSA) 관련 사건의 파장

□ EU의 대응

- ✓ 2013. 10. 24.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미국 NSA의 도청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논의
- ✓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2013. 10. 21.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전송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함. 미국 IT업체들이 EU 당국의 승인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해 가면 최대 1억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
- ✓ 미국 IT 기업의 주요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할 예정(클라우드서비스의 경우 서버가 미국에 있어 미국 정보기관의 접근이 쉬울 것이라는 우려 반영)
- ✓ 유럽의회는 EU에 미국과 은행계좌 정보공유도 중단할 것을 촉구(미국이 국제은행간통신망(SFIFT)을 감시해 온 것에 대한 반발)
- ✓ 독일 고위관리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위한 협상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마틴 숄츠 유럽의회 의장: 미국이 도청을 통해 EU의 전략을 모두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그 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는 TTIP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임.

SHIN&KIM

법무법인 세종

State Tower Namsan, 100 Toegye-ro, Jung-gu, Seoul 100-052, Korea

TEL : 82 2 316-4630 | FAX : 82 2 316-4852

E-MAIL : dybaek@shinkim.com

WWW.SHINKIM.COM

Thank You



s o l u t i o n

